반려제폐지, 年2만건 고소·고발… 광주·전남경찰 "버겁다"

광주·전남경찰청 전경. /뉴시스

고소·고발 급증에 격무 시달리는 일선서 경찰 수사관
광주 작년 1만9659건 1년새 52%↑… 증가율 전국 2위
전남 2만1347건, 42.97% 증가… 얼토당토 않는 사건도
수사과 기피, 수사 역량 저하 우려도… "대책 마련해야"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반려제가 폐지된 이후 광주·전남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경찰 수사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가뜩이나 심한 수사과 기피 현상마저 부추기고 있다. 수사관들의 과도한 업무와 '베테랑' 인력의 유출은 수사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도 적지 않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5개 일선서 수사과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022년 1만521건, 2023년 1만2884건, 지난해 1만96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고소·고발 반려제가 폐지된 직후인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52.58%(6775건)나 급증했다.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전북(53.9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전남 역시 2022년 1만2095건, 2023년 1만4931건을 수준을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42.97%(6416건) 증가한 2만134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사과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급증한 것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수사준칙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상담을 통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경기 침체 속 각종 경제·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노쇼' 범죄까지 기승, 가뜩이나 처리할 사건이 많아진 수사관들은 물 밀듯 들어오는 고소·고발 사건에 "심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광주의 한 일선서 간부급 경찰관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고발을 접수하게 돼 수사관들이 버거울 정도로 업무량이 늘었다"며 "얼토당토 않는 사건도 모두 받아주니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나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팀장급 경찰관은 "수사관 1명당 30~4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고소·고발 쳐내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실제 고소·고발 중 10% 이상은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붙들고 수사해 종결 처리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도 고소·고발이 밀려 들어 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수사과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사철이면 일선서 수사관 30% 상당이 타 부서 전보를 희망할 정도다. 인사 발령 최소 요건 기간만 채운 뒤 지구대·파출소나 기동대 등 외근으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도한 업무와 잦은 수사관 교체, '베테랑' 인력 유출은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치안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사관은 "수사 부서는 오랜 시간 일한 경험이 중요하다. 최소 3년은 일해야 업무가 능숙해진다"며 "경제·지능범죄 수사는 전문성도 필요로 한다.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 결국 수사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수사관은 "매일 1~2건을 종결하라는 얘기다. 큰 사건이 생기면 다른 사건들은 한동안 손도 대질 못한다. 모든 사건을 꼼꼼히 살필 겨를이 없지 않겠는가"라며 "수사 부서 정원을 대폭 늘려주거나 반려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권철 기자

국내 최고령 사형수 옥중 사망

관광객 4명 연쇄 살해·추행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복역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오모씨가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숨졌다. 향년 87세.

어부였던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에서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오씨는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의 살인 행각은 바다에서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오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1996년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 사형제 폐지 헌법 소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오씨는 2010년 2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고법이 오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판단에 나섰으나 이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해 6월 오씨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 이후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됐다.

한편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폐지 국가다. 지난 2019년 세 번째 사형제 폐지 헌법 소원이 제기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뉴시스

조선대병원 수간호사 부서원 불법도청 의혹

수간호사, '녹음 펜'으로 부서원 대화 불법감시 의혹
직장내 괴롭힘 진상 파악 중… 노조는 형사고발 검토

광주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 한 부서에서 직원 감시용 불법 도청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나왔다.

29일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6일 노무팀 주관 내부 조사위원회를 열어 간호부 소속팀 부서장인 A수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A수간호사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녹음 기능이 있는 소형 펜을 이용, 부서원인 간호사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팀 내 간호사들은 'A수간호사가 자신은 출근하지 않은 휴무일이나 휴게 시간에도 몰래 녹음한 것 같다. 부서원 간 대화나 움직임을 감시, 사실상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음 중인 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조사위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도청 외에도 A수간호사의 여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접수된 괴롭힘 신고 내용은 7가지 유형 별 행위로 분류됐다.

당초 피해를 호소하는 간호사들은 보복성 인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징계 과정에서의 고충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현실적인 업무 여건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상,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도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조사위 회의 과정에 참여한 노무사는 'A수간호사의 유형 별 괴롭힘 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가 접수된 사안 별로 건건이 조사·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피해를 주장하는 간호사들은 '특히 불법 도청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병원 내 보건의료노조는 A수간호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A수간호사는 일부 신고 내용 만큼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관련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면 규정과 절차 대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끝까지 쫓는다"… 필리핀으로 도망간 도박·횡령범 동시송환

우리은행 횡령범·투자리딩방 총책 등 2명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죄자 2명이 국내로 동시 송환됐다.

경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A(41)씨와 우리은행 횡령사범 B(57)씨 등 필리핀 도피사범 2명을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검거 5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금 규모 160억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피 생활 10년 만인 지난 3월, 현지 파견 경찰과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로 차량 미행 끝에 검거됐다. A씨 송환을 끝으로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같은 날 송환된 B씨는 2007년 우리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년에 걸친 도피 행각은 지난해 9월 B씨가 행정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되면서 막을 내렸다. 수배관서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B씨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급증하는 국제공조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하여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처·자식 태워 바다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 구속기소

처와 자식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살인·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12분께 가족여행을 이유로 무안 모 숙박업소에 하룻밤 숙박, 다음날인 31일 목포와 신안 등을 거쳐 진도로 이동했다.

이동 중 목포 평화광장 근처에서 차량 안에 있던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복용하게 했다. 수면제는 아내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 받았다. 범행 후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난 2일 선착장에서 약 3㎞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인 2일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 길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전민규 기자